중국 주변국외교와 한반도 문제

**진창이(金强一) 연변대학교 조선/한국연구센터 소장**

1.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과 주변국외교기조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주변국외교의 기본방침은 “이웃국가들과 잘 지내고 이웃국가를 동반자로 하여 선린(이웃국가와 화목하게 지내고), 안린(이웃국가를 안심시키고), 부린(이웃국가를 부유하게)을 견지해나가며 친(親), 성(誠), 惠(혜), 容(용)의 이념을 뚜렷하게 구현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도 재차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과 협력의 신안보관을 제의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협력∙공영하는 주변국외교정책의 기조를 정리한 것이다.

중국 주변국외교의 기본노선은 중국의 총체적 전략의 구현이다.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명확히 “두 개의 백년목표”를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2021년(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 전반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이루고, 2049년(중국 건국 100주년)까지 현대화 국가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현대화 국가를 실현한다는 것은 중국 전체 발전전략의 목표이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중국의 외교기조는 주변국가와 전면적 협력의 기초 위에서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은 전체 전략체계(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동북아는 중국이 전략목표를 실현시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북아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대국들이 운집되고 자원, 에너지, 자본, 기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황은 직접적으로 중국의 전략목표 실현 가능여부라는 중대한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점진적으로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을 구상하였고, 그 핵심은 동북아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는데 있다. 현재 동북아지역의 정세를 놓고 보면, 중국이 전략목표를 실현시키는 데는 많은 조건이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현단계에서의 우선적인 목표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주변환경을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2. 동북아 정세와 중국의 주변국외교

중국의 동북아 전략목표를 이상적인 좌표로 하여 동북아의 정세를 분석하면, 중국이 동북아발전전략을 실행해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주된 문제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한반도 문제, 둘째, 각국이 전략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들 간의 충돌(갈등), 셋째, 미국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해 억제하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전략이다. 이 세가지 문제들은 모두 내제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그 중 한반도문제가 가장 핵심이 된다.

중국이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중에 봉착할 수 있는 난관은 대부분 한반도 문제에서 유래된다. 한반도의 분단과 북한의 폐쇄라는 상황으로 인해 동북아의 지역협력은 현실적인 운용성이 결여되어 있다. 90년대 초부터 중국은 두만강유역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의 협력과 개발에 매우 주목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그 원인으로는 한반도의 분단과 북한이 폐쇄상황이(미개방상태) 동북아에 극복하기 힘든 장애를 형성하였다는 데에 있다.

한반도문제는 현재 두 번째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것은 각 국의 전략이 전면협력의 방향으로 나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각국은 전통적 안보문제에 더욱 집중하여 각국이 지향하는 전략에 상호 충돌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일 간에는 서로 지향하는 전략이 상호충돌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반도 문제는 이용가치가 있는 전략적 자원이 되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일본은 사실상 한반도정세를 이용하여 “국가정상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 전면적으로 협력할 필요성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수요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로 인해 동북아지역의 협력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본도 이러한 정세를 이용하여 “국가정상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협력과 갈등을 선택하는데 일본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한반도문제는 세 번째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한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구상을 진작 세웠다 하더라도, 이 전략을 실제 시행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10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포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매우 중요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반도에 동북아지역 구도를 변화시키기 충분한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2009년도 북한 제 2차 핵 위기,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동아시아지역은 끊이지 않는 동요의 국면에 빠져들었지만, 미국에게는 전략적인 기회가 생겼으며 미∙일, 한∙미 동맹체제는 신속하게 강화되었다. 2010년 미국은 이 상황에 편승하여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포하였으며, 미국의 전략적 행위에 자극받아 용기를 얻은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들은 잇달아 중국과 갈등을 야기하였다. 나비효과처럼 한반도에서의 움직임은 동아시아 지역에 격랑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전략, 중∙일, 한∙일 간의 역사인식과 영토분쟁,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한반도 핵 문제 그리고 (중국)남해 상의 도서주권분쟁 등의 문제들은 이미 새로운 지역적 관심사(화두)를 만들어 내는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우려가 되는 것은,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냉전구조가 나타난 것 같다는 점이다. 미∙일, 한∙미 동맹체제가 강화되고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전략을 내놓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등 역내 강대국을 억제하는 전략적 의도를 다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지역에 이러한 냉전구조로 돌아가려는 양상이 보이는 이유는 아마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반도에 냉전이 남긴 유물인 분단과 대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동북아지역 발전을 실천하는 전략에 나타난 세 가지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 문제인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의 동북아지역발전전략의 우선과제인 것이다.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면 동북아지역의 구조적 변동이 일어날 것이며, 동북아지역이 직면한 일련의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하여, 각국의 전략적 지향점을 전면적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그것은 작금의 대치, 대항, 충돌의 전략적 지향점이 협력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반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단계적으로 전략을 추진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 전략의 첫걸음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여 동북아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동북아 각 국가들에 국제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압력을 중점적으로 가하는 정책의 채택여부는 고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를 통해 가능하다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하여 한번에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채택해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핵 문제가 조성한 동북아지역의 신냉전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중 간에 전통적 우의만을 강조하고 종전의 한반도 정책만을 고수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미∙일, 한∙미 군사동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심각한 동맹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어찌되었든 중국에 이로울 것이 없다.

중국의 동북아지역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불리한 전략적 국면을 타계하기 위해 가장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한국이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한국은 전략적으로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고, 미국과 중국 양쪽에 모두 아쉬운 소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책선택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졌다. 만약 한국이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선택한다면, 동북아지역에는 새로운 냉전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이 미∙중 양국과 다원적인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선택한다면 동북아에서 “신냉전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며, 동시에 동북아에 안정적인 중심축의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대폭적으로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킨다는 것은 원대한 전략적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종식시키고,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국가 간의 새로운 냉전구조의 출현을 막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의 주변강대국에 통일이라는 대업에 대한 지지를 최대한 이끌어내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외교정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영역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014년 7월 3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한∙중 양국 간 최대치의 전략적 이익을 구현하였고, 한∙중 관계에서 동북아 역내 정세를 안정시키는 중심축을 만들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한중 협력은 더욱 희망적이 되었다.

현재 동북아의 모든 문제 해결의 매듭은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힘쓰게 할 수 있을 지가 동북아 주변국외교의 핵심의제가 된다. 한반도에 진정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중국과 한반도는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 발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중심축이 될 것이며, 전방위적인 협력과 공영(윈-윈)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현재 미∙중, 중∙일, 미∙러, 중∙러, 한∙중관계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 국가들의 전략을 전면협력으로 전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역내 쟁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한반도문제가 우선과제이다. 만약 동북아 역내의 국가들의 전략적 지향점이 협력으로 간다면, 다른 문제들은 순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다.